

한국인의 복지의식

김 상 균*

〈목 차〉	
I. 서론	III. 결론
II. 조사결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 사회의 복지제도 혹은 사회정책은 그 사회의 가치 혹은 사상의 표현물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의식의 현황이 분석되고 그 특성이 파악된다면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도 있다.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있지만 현실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오늘날 사회정책의 결정이 근본적으로 선택이라는 사실이 재강조되면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복지의식 조사는 1979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1981년의 영세민에 대한 조사, 1984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이 있다. 본 조사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조사는 10여년 전의 조사여서 복지의식이 상당히 변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존의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본 조사가 보완할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79년의 김영모 교수의 복지의식조사연구는 통계적 검증절차를 밟히지 않은채 집단간 복지의식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석방법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본 연구에서는 피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두가지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90년대 한국인의

*서울대, 사회복지학

복지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각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술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연구목적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복지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복지의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인간의 마음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은 마음의 인식작용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생기고 축적되는 마음의 인식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¹⁾ 또한 의식은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성향이라는 뜻의 태도라는 개념도 함축한다. 마음이 의식하는 것은 항상 어떤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의 복지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 혹은 의식을 우리는 복지의식이라고 개념규정할 수 있다.

복지의식의 내용들은 이념적 갈등의 근원을 따라 6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 첫째로 사회가치의 근본적 상이성에 따라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지향하는 쪽과 평등, 자유 그리고 우애를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둘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서,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책임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세번째 측면은 빈곤에 대한 상이한 개념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빈곤을 절대적 빈곤으로 개념규정하는 입장과 상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인간이 육체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가지지 못하여 문제가 될 때 사회복지적 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광범위한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네번째 이념적 갈등의 근원은 국가자원의 배분 및 분배문제에서 발견된다.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열등수급(less eligibility)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정부예산의 사회복지 지출을 억제하여 더 많은 국가자원이 시장경제의 확대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개발을 중요시

(1)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변화의 경험적 추적』, 박영사, 1992. p. 487

(2)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p.111-113.

하는 사람들은 경제불황 및 공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를 추구한다.

다섯번째 측면은 열등낙인(stigma)의 문제로서 국가자원의 낭비 예방, 근로의욕 고취 및 부정심리 추방 등 낙인이 주는 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낙인이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킴으로써 국민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낙인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측면은 국가자원의 낭비에 관한 논쟁에서 발견된다. 사회복지제도가 낭비적이고 부정심리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서 부유층의 탈세가 국가자원의 낭비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섯가지 측면에서 전자에 가까운 입장과 후자에 가까운 입장들이 의식의 스펙트럼상에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복지의식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복지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특정 형태의 복지의식을 갖게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복지의식의 밑바탕에는 개인의 가치나 이념이 깔려있다고 본다. 이는 복지모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데올로기를 구분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파커(Julia Parker)는 복지모형을 자유방임, 자유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하고 있으며, 죄지(Vic George)와 월딩(Paul Wilding)은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하고 있고, 루(Graham Room)은 시장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신마르크스주의로 분류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우리는 복지의식을 규정하는 요인 중에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계급 혹은 계층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념 혹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관련된 요인 중 사회계층(계급)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에 관련된 변수들로서 정치적 성향, 사회계층에 관련된 요소, 기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변수들 중 복지의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변수의 설정

앞장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독립변수

① 정치적 성향

*정치적 이념의 좌 ↔ 우 지향성: 변수값은 극좌 1, 좌 2, 중도 3, 우 4, 극우 5의 5점 척도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적극지지 5, 약간 지지 4, 중간 3, 약간 반대 2, 적극 반대 1의 5점 척도

② 사회적 계층

*주관적 계층 판단: 상류계층 1, 중상계층 2, 중하계층 3, 하류계층 4의 4점 척도

*소득수준: 50만원 미만 1, 50~99만원 2, 100~149만원 3, 150~199만원 4, 200만원 이상 5의 5점 척도

*직업: 1 전문관리직, 2 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생산직, 5 농어민, 6 학생, 7 주부, 8 무직

③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출신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이하

*학력: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상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복지와 관련된 9가지 영역에 대해 10문항이 준비되었다. 그것은 의료, 교육, 장애, 실업, 조세, 주택, 자선사업, 평등, 복지와 근면성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며 조세는 두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특정영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 내용에 대한 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의견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 ② 똑똑하지만 부모가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학시켜야 한다.
- ③ 우리 동네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 ④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 ⑥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

금을 내야 한다.

- ⑦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국유화시켜야 한다.
- ⑧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
- ⑨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는 좁혀질수록 좋다.
- ⑩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면 할수록 국가경제는 더 나빠지고 국민들은 더 게 읊려진다.

각 문항의 변수값은 전적 찬성 = 2, 약간 찬성 = 1, 약간 반대 = -1, 전적 반대 = -2점을 부과해서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③, ④, ⑧, ⑩ 문항과 같이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의 방식(전적 찬성 = -2, 전적 반대 = 2)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상의 10문항의 측정치를 모두 더한 것이 복지의식의 변수값으로 된다. 그런데 10개의 문항이 하나의 변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각 문항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문항 ③과 ⑥, ⑧, ⑩은 다른 문항과 상관관계가 적거나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하나의 변수로 포함시키기 곤란했다. 그래서 복지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는 10개 문항중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4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변수값은 -12점에서 12점까지로 구성된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반대경향이 심하다고 평가한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는 평등,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새로이 설정된 종속변수 '복지의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ext{*복지의식} = \text{문항 } ① + \text{문항 } ② + \text{문항 } ④ + \text{문항 } ⑤ + \text{문항 } ⑦ + \text{문항 } ⑨$$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인의 복지의식의 현황에 대한 기술과 복지의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에 대한 검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분석방법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복지의식에 대한 현황설명을 위한 기술통계방법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가설검증통계방법이다. 전자에 사용되는 변수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독립변수와 복지영역별 10개의 문항을 포함한 모든 종속변수들이며 각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분할표분석을 통해 변수들간의 관계를 기술할 것

이다. 후자에 사용되는 변수에서 독립변수는 전자와 동일하지만 종속변수는 6개 문항의 점수를 합한 새로운 변수인 '복지의식'이 된다. 통계기법은 두 집단간 의식의 차이를 분석할 경우 t-test를, 세 집단 이상일 경우 변량분석(ANOVA)을 사용했으며, 컴퓨터 통계패키지는 spsspc⁺를 이용하였다.

Ⅱ.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복지의식은 1장 3절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9가지 영역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장에서는 제1절에서 각 영역별 복지의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2절에서 영역별 복지의식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복지의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분야별 복지의식

① 의료에 대한 견해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견해에 찬성과 반대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찬성 2점, 약간 찬성 1점, 약간반대 -1점, 반대 -2점을 부과하였을 때 평균 0.774점으로서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이지만 그 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채택한 변수들에 따른 '의료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별 통계적 유의도를 테스트해 보았다. <표 2>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주관적 계층평가, 정치적 이념,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임이 확인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모든 변수(성, 연령, 학력, 지역)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성향은 두 변수 모두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계층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소득수준과 직업은 의미가 없었고 주관적 계층평가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표 1>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58	233	524	372	1,187
%	4.9	19.6	44.1	31.3	100.0
평균점수			.774		

〈표 2〉 '정부부담 의료혜택'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5.78148	3	.1227
연령	17.40738	12	.1349
학력	6.12814	9	.7270
지역적 배경	26.71585	18	.0845
주관적 계층평가	17.70199	9	.0388
소득수준	19.71519	12	.0727
직업	32.26821	21	.0550
정치적 성향	37.13702	15	.0012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23.13576	12	.0266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의식의 차이는 부록 〈표 1〉에서부터 〈표 3〉까지로 제시하였다. 이들 표에 나타난 특성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이념이 극좌인 사람들은 적극 찬성에 54.8%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중도파인 경우 약간 찬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전적 반대에는 극우파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8.1%)을 보여주고 있다(부록 〈표 1〉 참조).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의료에 대한 견해와 주관적 계층별 의료에 대한 견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자의 예상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계층별로는 하류계층일수록 의료비에 대한 정부부담을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외로 민주주의를 적극 반대하는 집단과 상류계층에서 전적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두 집단(민주주의 적극반대, 상류층)이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상은 음모이론적 시각에서 평가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 현상을 제외하고 계층별로는 하류계층이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에 찬성하는 비율이 46.6%로서 높게 나타났다(부록 〈표 2, 3〉 참조).

② 교육에 대한 견해

교육에 대해서는 의료보다 훨씬 찬성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똑하지만 부모가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학시켜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51.2%가 찬성이었고 전체평균은 1.304로써 의료분야의 평균 0.774점보다 훨씬 높다.

각 독립변수별 통계적 유의도를 테스트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학력, 직업, 정치적 이념의 3변수로 나타났다. 변수별 통계적 유의미성에 있어서 의료부문과 약간 다른 점이 발견되었는데,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의료와 교육부문 공히 차이를 나타내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 그리고 계층(주관적)별 차이는 교육부문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의료부문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던 학력, 직업의 차이가 교육부문에서 의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된 독립변수별 정부부담의 교육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대체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성향이 우파에서 극좌로 갈수록 '정부부담의 교육혜택'에 대해 전적 찬성의 견해가 높아지고 있으며(그러나 극우는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록 〈표 4〉 참조), 학력별 분포에 의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약간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어민,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등과 같은 하위 계층직업이 '전적 찬성'에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다(부록 〈표 5, 6〉 참조).

③ 실업에 대한 견해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지원'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값이 0.057로서 교육과 의료부문에 대한 견해보다 찬성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근로에 대한 우리국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

〈표 3〉 '정부부담의 교육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12	107	461	613	1,193
%	1.0	8.9	38.5	51.2	100.0
평균점수					1.304

〈표 4〉 '정부부담 교육혜택'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52337	3	.9137
연령	16.04138	12	.1893
학력	28.85286	18	.0502
지역적 배경	13.87302	9	.1269
주관적 계층평가	13.44087	9	.1437
소득수준	12.26003	12	.4250
직업	33.88338	21	.0373
정치적 성향	34.61264	15	.0028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17.49291	12	.1320

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복지혜택에 인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독립변수별 의식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유의미성을 평가한 χ^2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으며, 그외 학력과 계층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앞의 분석과 다른 점은 연령, 지역적 배경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 점이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된 독립변수별 분할표 분석의 결과는 부록 <표 7>에서부터 <표 11>까지 제시하였다. 정치성향별 실업에 관한 의식의 차이는 전적 찬성에 극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약간 찬성'은 극우에서 좌파 쪽으로 감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부록 <표 7>). 연령별 분포는 젊은 집단일수록 '약간 찬성'에 대한 응답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부록 <표 8>), 지역별 분포는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면 → 읍 → 중소도시 → 대도시) 점차 '약간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부록 <표 9>). 학력에 따른 차이는 무학을 제외하고 학력이 점차 높아질수록 '약간 찬성'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층별 실업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상류계층은 모두 '약간 반대'로 응답했고, 중상에서 하류계층으로 계층의 변동에 따라 '전적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부록 <표 10>).

<표 5>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지원'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199	344	459	175	1,177
%	16.9	29.2	39.0	14.9	100.0
평균점수			.057		

<표 6> 실업문제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 F.	Significance
성	.63607	3	.8881
연령	31.90880	12	.0014
학력	46.46261	18	.0003
지역적 배경	26.01940	9	.0020
주관적 계층평가	29.92830	9	.0005
소득수준	13.27446	12	.3494
직업	30.66952	21	.0793
정치적 성향	38.59858	15	.0007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13.69396	12	.3207

11> 참조).

④ 조세에 대한 견해

조세에 대한 문항은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라는 문항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라는 문항이다. 첫문항과 두번째 문항의 차이는 두번째 문항에 본인이 재분배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문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태도가 상반되게 나왔다는 점이다. <표 7>과 <표 8>을 살펴보면 첫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1.043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두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0.371로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분배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지만 본인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의사는 없다는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첫번째 문항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유의미성을 평가한 χ^2 검증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는데 성, 주관적 계층평가, 소득수준, 정치적 이념,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된 독립변수별 의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치적 성향이 극단인 경우(극좌, 극우)에 ‘전적 찬성’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도파 이거나 우파인 경우 ‘약간 찬성’의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12>).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에 따른 분포도를 살펴보면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수록 ‘전적 찬성’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부록 <표 13> 참조). 성별 분포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적 찬성’율이 높게 나타나고, 계층별로는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감에 따라 ‘전적 찬성’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수준별 태도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소득이 하위계층일수록 ‘전적 찬성’

<표 7> 조세에 대한 견해 I

구 분	명	%
전적 반대(-2)	53	4.4
약간 반대(-1)	156	13.0
약간 찬성 (1)	457	38.1
전적 찬성 (2)	522	43.6
합 계	1,188	100.0
평균점수		1.043

<표 8> 조세에 대한 견해 II

구 분	명	%
전적 반대(-2)	233	19.4
약간 반대(-1)	508	42.4
약간 찬성 (1)	358	29.9
전적 찬성 (2)	88	7.3
합 계	1,187	100.0
평균점수		- .371

율이 높게 나타난다(부록 〈표 14, 15, 16〉 참조).

두번째 문항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유의미성을 평가한 χ^2 검증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는데 성, 연령, 소득수준, 정치적 이념,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령은 첫번째 문항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본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주관적 계층의 경우 그 반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첫번째 문항과 차이가 없었다.

두번째 문항의 독립변수별 분포는 부록 〈표 17〉에서부터 〈표 21〉까지 제시하였다.

정치적 이념별 분포표를 보면 '전적 찬성'에서는 극우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약간 찬성'에서는 우파가, '약간 반대'에서는 중도파가, '전적 반대'에서는 극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정치적 성향이 극좌인 경우 재분배를 위해 본인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

〈표 9〉 '조세에 대한 견해 I'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8.78147	3	.0323
연령	13.64853	12	.3237
학력	19.20050	18	.3796
지역적 배경	14.33499	9	.1109
주관적 계층평가	32.13180	9	.0002
소득수준	24.81961	12	.0157
직업	15.13443	21	.8161
정치적 성향	40.50476	15	.0004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33.79511	12	.0007

〈표 10〉 '조세에 대한 견해 II'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19.92004	3	.0002
연령	35.47078	12	.0004
학력	20.94916	18	.2820
지역적 배경	4.08111	9	.9060
주관적 계층평가	12.16198	9	.2043
소득수준	36.50107	12	.0003
직업	24.43768	21	.2723
정치적 성향	49.45832	15	.0000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40.77422	12	.0001

는 것으로, 극우나 우파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낼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17〉).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지지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재분배를 위한 세금부담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적 찬성에 23.1%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고 약간 찬성까지 합하면 53.9%가 세금부담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부록 〈표 18〉). 성별 분포는 남성이 여성보다 세금부담의사가 높고(부록 〈표 19〉), 연령별로는 청년층보다 장년, 노년층이 세금부담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록 〈표 20〉을 보면 20대와 30대는 반대쪽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50대와 60대는 찬성쪽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적 찬성'에서는 가장 하위집단인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금부담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부록 〈표 21〉에서 '약간 찬성'란에 응답비율을 보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⑤ 주택문제에 대한 견해(택지 국유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국유화시켜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평균점은 -0.219였다. 이는 세금부담의사보다는 반대정도가 덜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반대도가 심한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유의미성을 평가한 χ^2 검증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는데 연령, 주관적 계층평가, 소득수준, 직업, 정치적 이념,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택지국유화에 대한 의식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의 경우 '전적 찬성'란에서는 극좌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약간 찬성'과 '약간 반대'에서는 중도파가, '전적 반대'에서는 우파와 극우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부록 〈표 22〉).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에 따른 택지국유화에 대한 견해는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수록 택지국유화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었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집단은 택지국유화를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부록 〈표 23〉). 연령별 분포의 경우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30대가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전적 찬성 + 약간찬성 = 47.2%) 40대, 50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찬성비율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 준다(부록 〈표 24〉). 이는 30대에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관심사로 부각되는 요즈음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는가 판단된다.

〈표 11〉 '택지의 국유화'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259	409	327	172	1,167
%	21.6	34.1	27.3	14.4	100.0
평균점수			-.219		

〈표 12〉 '택지 국유화'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5.87314	3	.1179
연 령	21.33607	12	.0457
학 력	23.35528	18	.1773
지역적 배경	5.36333	9	.8016
주관적 계층평가	24.07900	9	.0042
소득수준	21.20890	12	.0474
직 업	49.06290	21	.0005
정치적 성향	25.44387	15	.0443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42.05266	12	.0000

계층별로는 하류계층이 택지 국유화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류이상에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소득계층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하위계층에서 택지 국유화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직업별 분포의 경우 '전적 찬성' 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집단은 생산직이고, '약간 찬성'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반대하는 경향이 특별히 강한 집단은 학생과 농어민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25〉-〈표 27〉 참조)

⑥ 평등에 관한 견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는 좁혀질수록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경향은 〈표 13〉과 같이 나타났고 그 평균치는 1.537로서 10개 문항 중 찬성도가 가장 높았다.

이 문항에 대한 각 독립변수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유의미성을 평가한 χ^2 검증결과는 〈표 14〉와 같이 나타났는데,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계층, 소득수준의 세변수였는데, 이를 변수별 의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할표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분할표의 각 칸의 도수가 5 이하인 경우가 전체 칸의 30% 내외에 달해서 신뢰하기 힘들었다.

이와같이 집단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위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등에 대한 우리국민 전체의 의식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최빈치가 2(전적 찬성)로서 빈부격차가 좁혀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분만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복지의식을 구성하는 타 문항과 관련지워 생각해보면 평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지만 그 평등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의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⑦ 사회복지에 대한 왜곡된 편견의식의 정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개의 견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보았다.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들은 〈표 15〉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적 찬성은 -2점, 전적 반대는 2점을 부과하여 4점 척도로 했을 때 평균점수는 -0.122로서 사회복지를 자선사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표 16〉에 의하면 성과 주관적 계층평가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의 변수값의 차이가 의식의 차이에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계적 유의

〈표 13〉 '불평등 해소(평등)'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16	46	348	777	1.187
%	1.3	3.8	29.0	64.9	100.0
평균점수			1.537		

〈표 14〉 '평등'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4.93049	3	.1770
연령	12.11819	12	.4362
학력	28.60822	18	.0534
지역적 배경	7.86519	9	.5478
주관적 계층평가	18.71466	9	.0277
소득수준	29.01108	12	.0038
직업	24.80514	21	.2557
정치적 성향	21.37716	15	.1252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26.16235	12	.0102

미성이 검증된 독립변수별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자를 자선사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은 정치적 성향이 극좌나 극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젊은층(20대)에 비해 노년층(50대, 60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부록〈표 28〉에서부터 〈표 30〉까지 참조).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출신이, 학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그러한 경향성을 드러냈다(부록〈표 31〉에서 〈표 33〉 참조).

'우리 동네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표 17〉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앞 문항과 마찬가지로 전적 찬성은 -2점, 전적 반대는 2점을 부과하여 4점 척도로 했을 때 평균점수는 0.877이었다. 앞 문항의 결과와 달리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편견이 많이 완화되었거나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이다.

〈표 18〉 독립변수별 유의미성은 주관적 계층평가를 제외하고 모두 .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할표분석결과 성, 연령, 지역적 배경, 학력, 직업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나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와 같은 정치적 변수가 장애인에 대

〈표 15〉 '사회복지와 자선사업과 동일시'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168	466	379	141	1,154
%	14.6	40.4	32.8	12.2	100.0
평균점수					- .122

〈표 16〉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문항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2.05140	3	.5618
연령	46.25763	12	.0000
학력	126.98382	18	.0000
지역적 배경	22.77919	9	.0067
주관적 계층평가	12.78439	9	.1726
소득수준	21.17368	12	.0479
직업	75.49459	21	.0000
정치적 성향	42.28913	15	.0002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28.68400	12	.0044

한 편견의식의 차이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 연령, 지역적 배경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학력, 직업과 같은 계층구분을 보조할 수 있는 변수들이 간접적인 의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적극 찬성에 43.2%로서 여성의 3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약간 반대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다(부록 〈표 35〉).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연령별로 20대와 30대가 '전적 반대'에, 40대는 '약간 반대'에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50대와 60대는 '약간 찬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부록 〈표 36〉). 이는 젊은 집단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가 약하고 노령층으로 갈수록 편견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적 배경에 의하면 대도시 출신이 적극 찬성에 45.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읍, 면 이하의 농촌출신은 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보아 농촌 출신이 도시출신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표 17〉 '장애인 문제'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59	210	462	452	1,183
%	5.0	17.8	39.1	38.2	100.0
평균점수			.877		

〈표 18〉 '장애인'에 대한 견해와 각 독립변수별 분할표분석의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15.56680	3	.0014
연령	49.25308	12	.0000
학력	79.86436	18	.0000
지역적 배경	26.93085	9	.0014
주관적 계층평가	10.99584	9	.2760
소득수준	27.14328	12	.0074
직업	72.32937	21	.0000
정치적 성향	35.32327	15	.0022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47.78597	12	.0000

있다(부록 <표 37> 참조). 학력별로는 고등학교학력 이하에서 약간 반대가 약 20% 정도로서 그 이상의 학력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는 적극찬성에 상대적인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부록 <표 38>). 이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더 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약간 반대와 적극 반대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농어민, 주부, 판매서비스직에서 약간 찬성의 견해가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앞의 학력별 의식의 차이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텔리 계층이 종사하는 직업군은 타직업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록 <표 39>).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면 할수록 국가경제는 더 나빠지고 국민들은 게을러진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대의 경향이 우세했다. 전적 찬성은 -2점, 전적 반대는 2점을 부과하여 4점 척도로 했을 때 평균점수는 0.557로 나타났다.

<표 20> 각 독립변수별 유의도 검증에 의하면 성과 주관적 계층평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정치적 이념과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의식의 차이는 분할표분석 결과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별 분할표분석의 결과는 부록 <표 40>에서 <표 44>까지 제시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찬성 비율이 높으며, 20대와 30대는 반대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50대, 60대의 노령계층은 20대, 30대의 젊은 계층에 비해 사회복지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식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적 배경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 대해 도시지역의 반대율이 높았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사회복지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식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 의견의 차이를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와 국가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이 편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수준별로는 50만원 미만의 하위소득집단은 약간 찬성에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00만원-150만원 사이의 중간소득집단이 반대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복지의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앞 절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각 영역별 의식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각 영역별 의식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독립변수의 각 집단별 사회복지의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의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

〈표 19〉 '사회복지와 국가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 반대 (-2)	약간 반대 (-1)	약간 찬성 (1)	전적 찬성 (2)	합 계
빈 도 %	75 6.4	311 26.5	461 39.3	327 27.9	1.174 100.0
평균점수			.557		

〈표 20〉 '사회복지와 국가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구 분	Chi-Square	D.F.	Significance
성	7.19197	3	.0660
연령	64.96578	12	.0000
학력	114.95299	18	.0000
지역적 배경	47.20678	9	.0000
주관적 계층평가	9.20651	9	.4184
소득수준	22.00817	12	.0374
직업	76.45755	21	.0000
정치적 성향	27.39739	15	.0257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40.58873	12	.0001

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각 변수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독립변수는 앞에서 분석한 변수들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정치적 이념,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주관적 계층, 소득수준, 직업, 학력, 성, 연령, 지역적 배경 등이다. 맨 앞의 두변수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변수이며, 세번째에서 다섯번째 변수는 사회계층에 관한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다.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은 앞에서 분석한 각 복지영역에 대한 10개 문항중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4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설정된다. 그 항목들은 의료에 관한 항목, 교육에 대한 항목, 실업에 관한 항목, 조세(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주택문제에 대한 항목, 그리고 평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2, -1, 1, 2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복지의식'의 변량은 -12점에서 12점까지로 구성된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반대경향이 심하다고 평가한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는 평등,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サービ

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통계기법은 두집단간 의식의 차이를 분석할 경우 t-test를 사용했고, 세집단 이상일 경우 변량분석(ANOVA)을 이용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국민의 복지의식점수를 위의 척도로 평가해 보자. 〈표 21〉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값은 4.496이었고 최빈치는 5점이었다. 이 점수를 근거로 하여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평가하면, 앞에서 설명한 복지의식의 두 부류 중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회가치의 측면에서는 평등,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쪽의 복지의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그 강도는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간 복지의식 차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인구학적 변수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두 집단이 복지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2〉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과 여성은 복지의식이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21〉 복지의식점수 분포표*

구 분	-12~-8	-7~-3	-2~2	3~7	8~12	합계
빈 도	3	27	279	609	224	1143
%	0.3	2.4	24.4	53.3	19.6	100.0
평균점수	4.496			중앙값	5.000**	

* 이 표는 복지의식점수 -12에서 +12까지를 다시 시각적 편의를 위해 5점 단위로 묶어 표시한 것이다.

** 평균점수와 중앙값은 1점 단위로 계산된 것임.

〈표 22〉 성별 복지의식의 t-test

구 분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F값	1.04
남 성	602	4.5781	3.400	t값	.86
여 성	540	4.4037	3.468	자유도	1.140

*연령

연령별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23>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복지의식이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 연령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55.2095	13.8024	1.1716
집단내	1,135	13371.7344	11.7813	
전체	1,139	13426.9439		

*도시와 농촌(지역적 배경)

도시출신과 농촌출신(구체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이하)간의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량분석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것으로 평가된다. 즉 지역적 배경의 차이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지역적 배경에 따른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3	9.7846	3.2615	.2761
집단내	1,133	13386.2541	11.8149	
전체	1,136	13396.0387		

*학력

학력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표는 <표 25>와 같다. F값의 유의수준이 0.75로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력이 다른 집단간에 복지의식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정치적 성향

*좌파, 우파

<표 26>은 정치적 성향이 좌파지향적인가 우파지향적인가에 따라 5개 집단

<표 25> 학력별 사회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6	40.2043	6.7007	.5689
집단내	1,133	13344.5983	11.7781	
전체	1,139	13384.8026		

〈표 26〉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161.7272	40.4318	3.4773*
집단내	935	10871.5707	11.6273	
전체	939	11033.2979		

* $p < .01$

〈표 27〉 Scheffe Test 결과

집단	빈도	평균값	집단	1	2	3	4	5
극좌(1)	40	5.2250						
좌파(2)	138	5.1812	집단 1					
중도(3)	347	4.2651	집단 2					*
우파(4)	277	4.0758	집단 3					
극우(5)	138	4.7609	집단 4					
합계	940	4.4574	집단 5					

으로 나누었을 때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변량분석표이다. F값이 3.4773으로서 신뢰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더니 집단 2(좌파)와 집단 4(우파)간의 복지의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에 의하면 좌파와 우파 간의 복지의식의 차이는 그 평균값이 5.1812와 4.0758로서 약 1점 이상 좌파의 복지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이 좌파지향적인 집단이 우파지향적인 집단에 비해 평등지향적이고,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복지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 가능케 한다.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표 28〉은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5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변량분석표이다. F값의 유의도가 0.0202로서 신뢰도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Scheffe Test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군이 발견되지 않았다.

변량분석결과에 따른 복지의식의 대체적인 경향을 설명하면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중간인 집단의 복지의식이 4.08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지지도가 높거나 낮을 수록 복지의식의 평균치들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표 28〉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136.5841	34.1460	2.9225*
집단내	1,133	13237.9159	11.6840	
전체	1,137	13374.5000		

* $p < .05$

〈표 29〉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복지의식의 평균값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평균값	5.3846	4.8293	4.0800	4.3211	4.9243

*집단 1에서 집단 5의 순서는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데서 낮은 순서임

중 복지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 평균값이 5.3846인 민주화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이었다(〈표 29〉 참조).

③ 계층

*주관적 계층

계층이 다른 집단간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량분석결과는 〈표 30〉과 같다. F값은 3.4593이고 유의수준은 0.0159로서, 유의도 $p < .05$ 에서 종속변수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계층이 다른 집단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중상류계층과 하류계층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하류계층의 복지의식은 중상류계층에 비해 평등지향적이고,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중상류계층 복지의식지표 4.1641, 하류계층

〈표 30〉 계층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3	120.8455	40.2818	3.4593*
집단내	1,131	13170.0302	11.6446	
전체	1,134	13290.8758		

* $p < .05$

〈표 31〉 Scheffe Test 결과

집 단	빈도	평균값	집 단	1	2	3	4
상류계층(1)	3	3.6667					
중상계층(2)	390	4.1641	집단 1				
중하계층(3)	647	4.5270	집단 2				
하류계층(4)	95	5.3895	집단 3				
합 계	1,135	4.4722	집단 4	-----*			

5.3895).

*소득수준

〈표 32〉는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의식의 변량분석표이다. 50만원 미만의 하위집단의 복지의식 평균점수는 5.1842로서 200만원 이상의 상위집단의 점수 4.04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F값이 1.9554로서 신뢰수준 p < .0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소득수준별 복지의식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32〉 소득수준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90.9093	22.7273	1.9554
집단내	1.072	12459.7834	11.6229	
전 체	1.076	12550.6927		

*직업

직업에 따른 복지의식의 평균값과 변량분석표는 〈표 33〉이다. 전문관리직의 복지의식의 평균값이 3.9157로서 가장 낮고, 생산직의 점수는 5.481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F값의 유의수준이 0.0690으로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3〉 직업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7	154.3327	22.0475	1.8825
집단내	1.119	13105.3905	11.7117	
전 체	1.126	13259.7232		

3. 본 조사결과와 기존연구와의 비교

사회복지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79년 김영모 교수의 연구이다.⁽³⁾ 이 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척도가 본 연구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는 곤란하지만 비슷한 변수들에 대한 대강의 비교는 가능하다. 79년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 모델로서 이 변수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면 본 연구의 복지의식변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79년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사회복지모델은 복지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형과 정부책임을 강조하는 국가개입형을 양극단으로 하고 5단계로 구분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는 성, 연령, 학력, 재산, 수입, 계층, 지역, 직업으로 설정되었다. 조사결과 자유방임을 선호한 응답자는 전체의 8.0%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중간형태(46.6%)와 국가개입형(42.5%)을 선호했다. 독립변수별 의식의 차이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국가개입형을 더 선호했고, 계층별로는 중간층이 국가개입형을, 상층이 중간형태를, 하층이 자유방임형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한계들을 전제로 깔고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79년 연구에서 독립변수별 집단간 의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변수인 성별차이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은 복지의식이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계층별 의식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내용이 79년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79년 연구에서 중간계층이 가장 높은 점수(국가개입형)를, 하층이 가장 낮은 점수(자유방임형)를 받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하류계층이 가장 높은 점수(5.3895)를, 중상류계층이 이보다 낮은 점수(4.1641)를 나타냈다. 두 조사에서 사용한 변수와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지만, 약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계층간 의식의 변화의 폭과 그 방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다.

III.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김영모, 전계서, 일조각, 1980.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 이데올로기, 집합주의에 대한 경향 등을 양극단으로 나누어 -12점에서 12점까지 25점 척도로 했을 때, 평균 4.496으로서 중상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영역별 의식을 4점 척도로 했을 때, 평등에 관한 의식이 1.537로서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교육(1.304), 조세Ⅰ(1.043), 의료(0.774), 실업(0.057), 주택문제(-0.219), 조세Ⅱ(-0.371)의 순이었다. 독립변수별 의식의 차이에서 알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 국민은 평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평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 집단별 상이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택지의 국유화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취했고,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조세Ⅰ과 조세Ⅱ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데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본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사는 거의 없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각 영역별 의식을 종합한 복지의식에서 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변수들은 정치적 성향과 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사회복지의식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었고 정치적 이념이 좌파인 집단은 우파에 비해 복지의식의 평균값이 약 1점 이상 높았다. 계층별로는 중상류계층과 하류계층 간에 사회복지의식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하류계층이 중상류계층에 비해 약 1점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치를 준거로 하면, 정치적 이념이 좌파인 집단은 우파에 비해서, 계층이 하류계층은 중상류계층에 비해서, 사회가치의 측면에서는 평등,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부록] 독립변수별 복지의식의 분할표분석(단위: 명, %)

〈표 1〉 정치적 이념별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모르겠다	계
전적 찬성	23 54.8	49 35.3	90 25.3	78 27.6	51 34.5	59 37.6	350
약간 찬성	13 31.0	53 38.1	175 49.2	135 47.7	64 43.2	66 42.0	506
약간 반대	5 11.9	34 24.5	78 21.9	55 19.4	21 14.2	23 14.6	216
전적 반대	1 2.4	3 2.2	13 3.7	15 5.3	12 8.1	9 5.7	53
계	42 3.7	139 12.4	356 31.6	283 25.2	148 13.2	157 14.0	1.125 100.0

〈표 2〉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정부부담 의료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적극 반대	약간 반대	중간(5.6)	약간 지지	적극 지지	계
전적 찬성	8 61.5	15 35.7	71 30.1	152 30.0	123 32.1	369
약간 찬성	3 23.1	15 35.7	98 41.5	238 46.9	169 44.1	523
약간 반대	2 15.4	11 26.2	61 25.8	94 18.5	64 16.7	232
전적 반대		1 2.4	6 2.5	23 4.5	27 7.0	57
계	13 1.1	42 3.6	236 20.0	507 42.9	383 32.4	1.181 100.0

〈표 3〉 주관적 계층별 분포

구 분	상류계층	중상계층	중하계층	하류계층	계
전적 찬성	2 66.7	120 29.9	194 28.9	48 46.6	364
약간 찬성	1 33.3	174 43.4	316 47.1	32 31.1	523
약간 반대		85 21.2	130 19.4	18 17.5	233
전적 반대		22 5.5	31 4.6	5 4.9	58
계	3 .3	401 34.0	671 57.0	103 8.7	1,178 100.0

〈표 4〉 정치적 성향별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모르겠다	계
전적 찬성	24 55.8	78 55.3	182 51.0	126 44.5	89 60.1	85 53.8	584
약간 찬성	15 34.9	53 37.6	136 38.1	122 43.1	52 35.1	55 34.8	433
약간 반대	2 4.7	10 7.1	38 10.6	34 12.0	4 2.7	15 9.5	103
전적 반대	2 4.7		1 .3	1 .4	3 2.0	3 1.9	10
계	43 3.8	141 12.5	357 31.6	283 25.0	148 13.1	158 14.0	1,130 100.0

〈표 5〉 학력별 '정부부담의 교육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계
전적 찬성	11 55.0	76 65.0	94 55.0	236 52.3	53 46.1	124 45.9	17 36.2	611
약간 찬성	6 30.0	35 29.9	62 36.3	175 38.8	48 41.7	113 41.9	22 46.8	461
약간 반대	3 15.0	6 5.1	12 7.0	34 7.5	14 12.2	30 11.1	8 17.0	107
전적 반대			3 1.8	6 1.3		3 1.1		12
계	20 1.7	117 9.8	171 14.4	451 37.9	115 9.7	270 22.7	47 3.9	1,191 100.0

〈표 6〉 직업별 '정부부담의 교육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전문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직	농어민	학생	주부	무직	계
전적 찬성	78 45.9	62 42.8	113 52.1	52 59.8	114 63.7	41 44.6	120 51.5	25 45.5	605
약간 찬성	70 41.2	68 46.9	85 39.2	29 33.3	49 27.4	37 40.2	92 39.5	24 43.6	454
약간 반대	21 12.4	12 8.3	18 8.3	6 6.9	14 7.8	13 14.1	19 8.2	4 7.3	107
전적 반대	1 .6	3 2.1	1 .5		2 1.1	1 1.1	2 .9	2 3.6	12
계	170 14.4	145 12.3	217 18.4	87 7.4	179 15.2	92 7.8	233 19.8	55 4.7	1,178 100.0

〈표 7〉 정치적 성향별 '실업자에 대한 금전지원'에 대한 견해

구 분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모르겠다	계
전적 찬성	8 19.0	23 16.3	62 17.4	46 16.3	31 21.8	15 9.7	185
약간 찬성	12 28.6	29 20.6	107 30.1	101 35.8	32 22.5	44 28.6	325
약간 반대	9 31.0	65 46.1	143 40.2	103 36.5	51 35.9	68 44.2	439
전적 반대	13 31.0	24 17.0	44 12.4	32 11.3	28 19.7	27 17.5	168
계	42 3.8	141 12.6	356 31.9	282 25.2	142 12.7	154 13.8	1.117 100.0

〈표 8〉 연령별 '실업자에 대한 금전지원'에 대한 견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적 찬성	43 12.0	63 17.6	44 19.3	40 23.5	9 14.5	199
약간 찬성	98 27.5	97 27.1	63 27.6	61 35.9	24 38.7	343
약간 반대	168 47.1	143 39.9	84 36.8	44 25.9	19 30.6	458
전적 반대	48 13.4	55 15.4	37 16.2	25 14.7	10 16.1	175
계	357 30.4	358 30.5	228 19.4	170 14.5	62 5.3	1.175 100.0

〈표 9〉 지역규모별 '실업자에 대한 금전지원'에 대한 견해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이하	계
전적 찬성	53 13.6	38 16.1	21 13.5	86 22.0	198
약간 찬성	105 26.9	72 30.5	50 32.3	115 29.4	342
약간 반대	179 45.9	97 41.1	61 39.4	121 30.9	458
전적 반대	53 13.6	29 12.3	23 14.8	69 17.6	174
계	390 33.3	236 20.1	155 13.2	391 33.4	1,172 100.0

〈표 10〉 학력별 '실업자에 대한 금전지원'에 대한 견해

구 분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계
전적 찬성	2 10.5	21 18.3	40 24.0	78 17.5	17 14.9	34 12.7	7 14.9	199
약간 찬성	8 42.1	42 36.5	48 28.7	131 29.4	34 29.8	71 26.5	9 19.1	343
약간 반대	8 42.1	25 21.7	54 32.3	166 37.3	52 45.6	127 47.4	27 57.4	459
전적 반대	1 5.3	27 23.5	25 15.0	70 15.7	11 9.6	36 13.4	4 8.5	174
계	19 1.6	115 9.8	167 14.2	445 37.9	114 9.7	268 22.8	47 4.0	1,175 100.0

〈표 11〉 주관적 계층평가 '실업자에 대한 금전지원'에 대한 견해

구 분	상류계층	중상계층	중하계층	하류계층	계
전적 찬성		70 17.5	107 16.0	22 21.8	199
약간 찬성	3 100.0	110 27.6	196 29.5	34 33.7	343
약간 반대		174 43.6	261 39.1	21 20.8	456
전적 반대		45 11.3	103 15.4	24 23.8	172
계	3 .3	399 34.1	667 57.0	101 8.6	1,170 100.0

〈표 12〉 정치적 성향별 '조세에 대한 견해 I'의 경향

구 분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모르겠다	계
전적 찬성	21 48.8	65 45.8	152 42.7	122 43.4	71 48.6	66 41.8	497
약간 찬성	7 16.3	52 36.6	137 38.5	120 42.7	52 35.6	63 39.9	431
약간 반대	6 14.0	19 13.4	52 14.6	33 11.7	18 12.3	20 12.7	148
전적 반대	9 20.9	6 4.2	15 4.2	6 2.1	5 3.4	9 5.7	50
계	43 3.8	142 6	356 31.6	281 25.0	146 13.0	158 14.0	1,126 100.0

〈표 13〉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조세에 대한 견해 I'의 경향

구 분	적극 반대	약간 반대	중간	약간 지지	적극 지지	계
전적 찬성	5 38.5	17 39.5	91 37.9	209 41.4	196 51.4	518
약간 찬성	4 30.8	17 39.5	89 37.1	211 41.8	134 35.2	455
약간 반대	2 15.4	6 14.0	46 19.2	71 14.1	31 8.1	156
전적 반대	2 15.4	3 7.0	14 5.8	14 2.8	20 5.2	53
계	13 1.1	43 3.6	240 20.3	505 42.7	381 32.2	1,182 100.0

〈표 14〉 성별 분포표

구 分	남자	여자	계
적극 찬성	298 47.8	224 39.6	522
약간 찬성	224 36.0	233 41.2	457
약간 반대	78 12.5	78 13.8	156
적극 반대	23 3.7	30 5.3	53
계	623 52.4	565 47.6	1,188 100.0

〈표 15〉 주관적 계층별 분포표

구 분	상류계층	중상계층	중하계층	하류계층	계
전적 찬성	1 33.3	153 38.3	293 43.5	69 67.0	516
약간 찬성	1 33.3	166 41.5	263 39.1	25 24.3	455
약간 반대	1 33.3	65 16.3	84 12.5	5 4.9	155
전적 반대		16 4.0	33 4.9	4 3.9	53
계	3 .3	400 33.9	673 57.1	103 8.7	1,179 100.0

〈표 16〉 조세별 ‘조세에 대한 견해 I’ 의 경향

(소득: 만원)

구 분	49 이하	50-99	100-149	150-199	200 이상	계
전적 찬성	42 50.0	128 49.4	162 47.0	82 38.1	75 35.4	489
약간 찬성	31 36.9	84 32.4	134 38.8	97 45.1	87 41.0	433
약간 반대	8 9.5	34 13.1	33 9.6	28 13.0	41 19.3	144
전적 반대	3 3.6	13 5.0	16 4.6	8 3.7	9 4.2	49
계	84 7.5	259 23.2	345 30.9	215 19.3	212 19.0	1,115 100.0

〈표 17〉 정치적 성향별 '조세에 대한 견해Ⅱ'의 경향

구 분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모르겠다	계
전적 찬성	2 4.7	8 5.6	16 4.5	30 10.6	23 15.9	5 3.2	84
약간 찬성	14 32.6	36 25.4	108 30.3	94 33.3	43 29.7	40 25.5	335
약간 반대	14 32.6	52 43.7	165 46.3	122 43.3	48 33.1	74 47.1	485
전적 반대	13 30.2	36 25.4	67 18.8	36 12.8	31 21.4	38 24.2	221
계	43 3.8	142 12.6	356 31.6	282 25.1	145 12.9	157 14.0	1,125 100.0

〈표 18〉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조세에 대한 견해Ⅱ'의 경향

구 분	적극 반대	약간 반대	중간(5.6)	약간 지지	적극 지지	계
전적 찬성	3 23.1	3 7.0	13 5.4	40 7.9	28 7.4	87
약간 찬성	4 30.8	5 11.6	53 22.2	160 31.6	136 35.8	358
약간 반대	2 15.4	20 46.5	115 48.1	228 45.0	139 36.6	504
전적 반대	4 30.8	15 34.9	58 24.3	79 15.6	77 20.3	233
계	13 1.1	43 3.6	239 20.2	507 42.9	380 32.1	1,182 100.0

〈표 19〉 성별 분포표

구 분	남자	여자	계
적극 찬성	56 9.0	32 5.7	88
약간 찬성	210 33.8	148 26.2	358
약간 반대	257 41.3	251 44.4	508
적극 반대	99 15.9	134 23.7	233
계	622 52.4	565 47.6	1,187 100.0

〈표 20〉 연령별 분포표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적 찬성	14 3.9	25 6.8	16 7.0	24 14.0	9 14.3	88
약간 찬성	93 26.0	108 29.8	75 32.6	58 33.9	24 38.1	358
약간 반대	172 48.0	158 43.5	94 40.9	58 33.9	24 38.1	506
전적 반대	79 22.1	72 19.8	45 19.6	31 18.1	6 9.5	233
계	358 30.2	363 30.6	230 19.4	171 14.4	63 5.3	1,185 100.0

〈표 21〉 소득계층별 '조세에 대한 견해Ⅱ'의 경향

(소득: 만원)

구 분	49 이하	50-99	100-149	150-199	200 이상	계
전적 찬성	12 14.3	18 6.9	14 4.1	17 7.9	21 9.9	82
약간 찬성	19 22.6	65 25.1	102 29.7	66 30.7	78 36.8	330
약간 반대	28 33.3	121 46.7	149 43.3	96 44.7	88 41.5	482
전적 반대	25 29.8	55 21.2	79 23.0	36 16.7	25 11.8	220
계	84 7.5	259 23.2	344 30.9	215 19.3	212 19.0	1,114 100.0

〈표 22〉 정치적 성향별 '택지 국유화'에 대한 견해

구 분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모르겠다	계
전적 찬성	12 29.3	25 17.7	44 12.5	28 10.0	23 16.1	25 16.4	157
약간 찬성	11 26.8	40 28.4	104 29.5	75 26.7	38 26.6	44 28.9	312
약간 반대	14 34.1	52 36.9	133 37.8	101 35.9	44 30.8	49 32.2	393
전적 반대	4 9.8	24 17.0	71 20.2	77 27.4	38 26.6	34 22.4	248
계	41 3.7	141 12.7	352 31.7	281 25.3	143 12.9	152 13.7	1,110 100.0

〈표 23〉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택지 국유화'에 대한 견해

구 분	적극 반대	약간 반대	중간(5.6)	약간 지지	적극 지지	계
전적 찬성	7 53.8	10 23.8	30 12.8	56 11.3	69 18.3	172
약간 찬성	2 15.4	15 35.7	70 29.9	143 28.8	96 25.5	326
약간 반대	2 15.4	12 28.6	69 29.5	200 40.2	124 32.9	407
전적 반대	2 15.4	5 11.9	65 27.8	98 19.7	88 23.3	258
계	13 1.1	42 3.6	234 20.1	497 42.7	377 32.4	1,163 100.0

〈표 24〉 연령별 '택지 국유화'에 대한 견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적 찬성	42 11.8	66 18.3	29 13.1	29 17.4	6 10.0	172
약간 찬성	102 28.7	104 28.9	65 29.3	33 19.8	22 36.7	326
약간 반대	141 39.6	116 32.2	75 33.8	60 35.9	16 26.7	408
전적 반대	71 19.9	74 20.6	53 23.9	45 26.9	16 26.7	259
계	356 30.6	360 30.9	222 19.1	167 14.3	60 5.2	1,165 100.0

〈표 25〉 주관적 계층별 '택지 국유화'에 대한 견해

구 분	상류계층	중상계층	중하계층	하류계층	계
전적 찬성		52 13.1	93 14.0	24 24.5	169
약간 찬성	1 33.3	118 29.8	177 26.7	30 30.6	326
약간 반대	1 33.3	134 33.8	256 38.6	16 16.3	407
전적 반대	1 33.3	92 23.2	137 20.7	28 28.6	258
계	3 .3	396 34.1	663 57.2	98 8.4	1,160 100.0

〈표 26〉 소득수준별 '택지 국유화'에 대한 견해

(소득: 만원)

구 분	49 이하	50-99	100-149	150-199	200 이상	계
전적 찬성	15 19.0	46 18.0	53 15.5	25 11.8	22 10.4	161
약간 찬성	28 35.4	73 28.5	92 27.0	54 25.5	59 28.0	306
약간 반대	16 20.3	82 32.0	134 39.3	79 37.3	79 37.4	390
전적 반대	20 25.3	55 21.5	62 18.2	54 25.5	51 24.2	242
계	79 7.2	256 23.3	341 31.0	212 19.3	211 19.2	1,099 100.0

〈표 27〉 직업별 '택지 국유화'에 대한 견해

구 분	전문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직	농어민	학생	주부	무직	계
전적 찬성	32 19.0	21 14.6	28 13.2	22 26.2	15 8.6	6 6.6	38 16.9	6 11.1	168
약간 찬성	40 23.8	44 30.6	73 34.4	19 22.6	44 25.3	21 23.1	74 32.9	10 18.5	325
약간 반대	50 29.8	54 37.5	69 32.5	31 36.9	66 37.9	39 42.9	69 30.7	26 48.1	404
전적 반대	46 27.4	25 17.4	42 19.8	12 14.3	49 28.2	25 27.5	44 19.6	12 22.2	255
계	168 14.6	144 12.5	212 18.4	84 7.3	174 15.1	91 7.9	225 19.5	54 4.7	1,152 100.0

〈표 28〉 정치적 성향과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동일시 경향

구 분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모르겠다	계
전적 찬성	8 18.6	17 12.0	36 10.3	31 11.2	37 25.9	28 19.2	157
약간 찬성	20 46.5	58 40.8	141 40.5	120 43.3	46 32.2	59 40.4	444
약간 반대	8 18.6	40 28.2	136 39.1	93 33.6	42 29.4	44 30.1	363
전적 반대	7 16.3	27 19.0	35 10.1	33 11.9	18 2.6	15 10.3	135
계	43 3.9	142 12.9	348 31.7	277 25.2	143 13.0	146 13.3	1,099 100.0

〈표 29〉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동일시 경향

구 분	적극 반대	약간 반대	중간(5,6)	약간 지지	적극 지지	계
전적 찬성	1 7.7	4 9.3	34 14.5	50 10.3	78 21.0	167
약간 찬성	4 30.8	18 41.9	106 45.1	210 43.1	127 34.1	465
약간 반대	5 38.5	15 34.9	70 29.8	171 35.1	116 31.2	377
전적 반대	3 23.1	6 14.0	25 10.6	56 11.5	51 13.7	141
계	13 1.1	43 3.7	235 20.4	487 42.3	372 32.3	1,150 100.0

〈표 30〉 연령별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동일시 경향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적 찬성	33 9.3	50 14.0	34 15.4	38 23.6	12 20.3	167
약간 찬성	123 34.6	152 42.7	99 44.6	69 42.9	23 39.0	466
약간 반대	137 38.6	116 32.6	72 32.6	34 21.1	19 32.2	378
전적 반대	62 17.5	38 10.7	16 7.2	20 12.4	5 8.5	141
계	355 30.8	356 30.9	221 19.2	161 14.0	59 5.1	1,152 100.0

〈표 31〉 출신지역별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동일시 경향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이하	계
전적 찬성	44 11.4	38 16.0	23 15.5	61 16.2	166
약간 찬성	136 35.1	93 39.2	62 41.9	172 45.6	463
약간 반대	144 37.2	76 32.1	46 31.1	113 30.0	379
전적 반대	63 16.3	30 12.7	17 11.5	31 8.2	141
계	387 33.7	237 20.6	48 12.9	377 32.8	1,149 100.0

〈표 32〉 학력별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동일시 경향

구 分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계
전적 찬성	3 16.7	16 15.4	35 22.0	78 17.7	17 14.9	17 6.3	1 2.1	167
약간 찬성	6 33.3	59 56.7	70 44.0	190 43.1	52 45.6	77 28.6	12 25.5	466
약간 반대	8 44.4	24 23.1	46 28.9	134 30.4	37 32.5	113 42.0	17 36.2	379
전적 반대	1 5.6	5 4.8	8 5.0	39 8.8	8 7.0	62 23.0	17 36.2	140
계	18 1.6	104 9.0	159 13.8	441 38.3	114 9.9	269 23.4	47 4.1	1,152 100.0

〈표 33〉 소득별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동일시 경향

(소득: 만원)

구 分	49 이하	50-99	100-149	150-199	200 이상	계
전적 찬성	18 24.0	41 16.3	53 15.8	25 11.6	18 8.6	155
약간 찬성	33 44.0	104 41.3	127 37.8	91 42.3	83 39.7	438
약간 반대	18 24.0	79 31.3	116 34.5	76 35.3	73 34.9	362
전적 반대	6 8.0	28 11.1	40 11.9	23 10.7	35 16.7	132
계	75 6.9	252 23.2	336 30.9	215 19.8	209 19.2	1.087 100.0

〈표 34〉 직업별 '사회복지와 자선사업' 동일시 경향

구 分	전문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직	농어민	학생	주부	무직	계
전적 찬성	18 10.7	21 14.7	39 18.1	19 22.9	27 16.5	3 3.3	34 15.5	2 3.8	163
약간 찬성	53 31.5	59 41.3	102 47.2	32 38.6	78 47.6	26 28.3	96 43.6	17 32.1	463
약간 반대	64 38.1	46 32.2	58 26.9	27 32.5	47 28.7	40 43.5	65 29.5	26 49.1	373
전적 반대	33 19.6	17 11.9	17 7.9	5 6.0	12 7.3	23 25.0	25 11.4	8 15.1	140
계	168 14.7	143 12.6	216 19.0	83 7.3	164 14.4	92 8.1	220 19.3	53 4.7	1.139 100.0

〈표 35〉 성별 견해(장애인)

구 분	남자	여자	계
적극 찬성	31 5.0	28 5.0	59
약간 찬성	93 15.0	117 20.7	210
약간 반대	227 36.7	235 41.6	462
적극 반대	267 43.2	185 32.7	452
계	618 52.2	565 47.6	1,183 100.0

〈표 36〉 연령별 장애인에 대한 견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적 찬성	8 2.2	22 6.1	16 7.0	9 5.3	4 6.2	59
약간 찬성	40 11.1	65 18.0	44 19.4	40 23.7	21 32.3	210
약간 반대	137 38.2	136 37.7	101 44.5	63 37.3	23 35.4	460
전적 반대	174 48.5	138 38.2	66 29.1	57 33.7	17 26.2	452
계	359 30.4	361 30.6	227 19.2	169 14.3	65 5.5	1,181 100.0

〈표 37〉 지역별 장애인에 대한 견해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이하	계
전적 찬성	11 2.8	9 3.8	13 8.4	26 6.6	59
약간 찬성	58 14.9	42 17.5	24 15.5	84 21.3	208
약간 반대	143 36.9	92 38.3	61 39.4	163 41.3	459
전적 반대	176 45.4	97 40.4	57 36.8	122 30.9	452
계	388 32.9	240 20.4	155 13.2	395 33.5	1,178 100.0

〈표 38〉 학력별 장애인에 대한 견해

구 分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계
전적 찬성	4 20.0	8 7.0	14 8.4	26 5.8	3 2.6	3 1.1	1 2.1	59
약간 찬성	5 25.0	26 22.8	32 19.2	102 22.6	13 11.3	30 11.2	2 4.3	210
약간 반대	6 30.0	52 45.6	68 40.7	162 35.9	54 47.0	93 34.8	26 55.3	461
전적 반대	5 25.0	28 24.6	53 31.7	161 35.7	45 39.1	141 52.8	18 38.3	451
계	20 1.7	114 9.7	167 14.1	451 38.2	115 9.7	267 22.6	47 4.0	1,181 100.0

〈표 39〉 직업별 장애인에 대한 견해

구 분	전문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직	농어민	학생	주부	무직	계
전적 찬성	2 1.2	4 2.8	16 7.4	5 5.8	13 7.4	1 1.1	14 6.1	2 3.6	57
약간 찬성	26 15.5	21 14.5	37 17.2	12 14.0	48 27.3	3 3.3	54 23.4	7 12.7	208
약간 반대	68 40.5	71 49.0	80 37.2	25 29.1	65 36.9	36 39.1	94 40.7	19 34.5	458
전적 반대	72 42.9	49 33.8	82 38.1	44 51.2	50 28.4	52 56.5	69 29.9	55 49.1	445
계	168 14.4	145 12.4	215 18.4	86 7.4	176 15.1	92 7.9	231 19.8	55 4.7	1,168 100.0

〈표 40〉 연령별 '경제와 복지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견해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적 찬성	9 2.5	26 7.2	18 8.0	16 9.4	6 10.0	75
약간 찬성	65 18.3	88 24.4	69 30.5	61 35.9	28 46.7	311
약간 반대	152 42.7	146 40.6	94 41.6	56 32.9	13 21.7	461
전적 반대	130 36.5	100 27.8	45 19.9	37 21.8	13 21.7	325
계	356 30.4	360 30.7	226 19.3	170 14.5	60 5.1	1,172 100.0

〈표 41〉 지역별 '경제와 복지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견해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이하	계
전적 찬성	18 4.6	9 3.8	8 5.2	39 10.0	74
약간 찬성	77 19.8	66 27.6	48 31.4	118 30.3	309
약간 반대	146 37.6	97 40.6	64 41.8	152 39.1	459
전적 반대	147 37.9	67 28.0	33 21.6	80 20.6	327
계	388 33.2	239 20.4	153 13.1	389 33.3	1,169 100.0

〈표 42〉 학력별 '경제와 복지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견해

구 分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계
전적 찬성	3 18.8	13 11.5	17 10.2	29 6.5	3 2.6	8 3.0	2 4.3	75
약간 찬성	5 31.3	56 49.6	62 37.1	111 24.9	18 15.7	51 19.0	8 17.0	311
약간 반대	5 31.3	32 28.3	57 34.1	191 42.8	61 53.0	98 36.6	17 36.2	461
전적 반대	3 18.8	12 10.6	31 18.6	115 25.8	33 28.7	111 41.4	20 42.6	325
계	16 1.4	113 9.6	167 14.2	446 38.1	115 9.8	268 22.9	47 4.0	1,172 100.0

〈표 43〉 소득수준별 '경제와 복지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견해

(소득: 만원)

구 分	49 이하	50-99	100-149	150-199	200 이상	계
전적 찬성	7 8.4	21 8.3	16 4.7	16 7.4	12 5.7	72
약간 찬성	35 42.2	71 28.0	81 23.7	58 27.0	49 23.2	294
약간 반대	19 22.9	95 37.4	144 42.1	82 38.1	92 43.6	432
전적 반대	22 26.5	67 26.4	101 29.5	59 27.4	58 27.5	307
계	83 7.5	254 23.0	342 31.0	251 19.5	211 19.1	1,105 100.0

〈표 44〉 직업별 '경제와 복지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견해

구 分	전문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직	농어민	학생	주부	무직	계
전적 찬성	11 6.5	4 2.8	13 6.0	5 5.9	21 12.2	2 2.2	16 7.0	3 5.5	75
약간 찬성	38 22.6	28 19.4	73 33.8	26 30.6	69 40.1	11 12.0	55 24.2	8 14.5	308
약간 반대	62 36.9	67 46.5	80 37.0	35 41.2	53 30.8	38 41.3	97 42.7	25 45.5	457
전적 반대	57 33.9	45 31.3	50 23.1	19 22.4	29 16.9	41 44.6	59 26.0	19 34.5	319
계	168 14.5	144 12.4	216 18.6	85 7.3	172 14.8	92 7.9	227 19.6	55 4.7	1,159 100.0